

공무원 연가 사용 얼마나 못하길래...

전남도, 사용일수 3년째 감소...권장 일수 10일분 보상 안기로 무보상 시행 광주시 사용 늘어... 시도 공무원 "업무부터 줄여야"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줄어들면서 광주시와 전남도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장려하고 나섰다. 일과 가정의 조화를 이룰 공직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목이다.

다만 일부 공무원은 일 자체가 많아 연가 사용이 어렵다며, 업무 분장과 같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13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남도 소속 공무원의 평균 연가 사용일수가 줄고 있다. 2020년에는 9.9일이었지만, 2021년 8.6일, 2022년 8.4일로 3년만에 1일 이상 줄어 들었다.

2018년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최소 10일 이상의 연가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

다. 전남도는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권장 연가일수 10일에 대해서는 연가보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전남도 소속 6년차 공무원의 경우 전체 연가 20일 중 7일만 사용했다면, 사용하지 않은 13일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권장 연가일수 10일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전체 연가 일수 20일 중 13일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10일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휴식있는 삶을 제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는 목적이다.

전남도는 간부 공무원과 부서장의 연가 사용을

독려해, 전체 공무원의 연가 사용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기념일, 명절 전후, 징검다리 휴일에 연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업무추진에 특별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동일한 시기에 부서 직원의 3분의 1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까지 연가를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전남도의 평균 연가 사용일수가 줄어든 원인은 10년차 이상 팀장급들이 연가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예전의 눈치보던 습관이 남아있다가, 주 6일 근무하던 경험이 남아 주 5일 근무를 하며 만족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눈치보는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며 "다만 간부급에서는 쟁야할 것도 많고, 부서 전체를 돌보아야 하니 자발적으로 연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전남도 소속 10년차 공무원은 "기획실 등 바쁜 부서에서는 부서 특성상 연가를 쓰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많다"며 "상대적으로 전남도 공무원들

의 연령대가 높아 자유로운 연가사용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도 소속 공무원은 50대 이상이 822명으로 전체 2591명 중 가장 많은 31%를 차지했다. 40대 이상은 1595명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해, 20~30대인 MZ세대보다 많다.

광주시도 지난해부터 미사용 권장 연가일수 10일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

13일 광주시에 따르면 2021년 소속 공무원의 평균 연가 사용일수는 8.7일이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2022년부터는 9.7일로 1일이 늘었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아도 보상을 받지 못하다보니, 어떻게든 연가를 사용해 일수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때는 업무가 많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았는데 제도 시행 이후 연가 사용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며 "예전처럼 연가 사용에 눈치를 주는 문화는 거의 없지만, 팀장급 이상 공무원들은 부서를 관리하

는 입장이다보니 연가 사용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 소속 2년차 공무원은 "연가를 사용하는 데 거의 부담이 없어 저연차 공무원은 대부분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용하지 못한 연가를 보상받지 못하다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주 자치구의 한 공무원은 "업무 효율을 높이는 측면도 있지만, 코로나19때 대부분의 공무원이 휴가를 반납하고 업무를 보다보니 연가보상비 지출이 늘어 예산을 줄이려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도 공무원노조는 "노조와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미사용 권장 연가일수 10일에 대해 미보상 결정을 내려 유감이다"며 "눈코뜰새 없이 바빠서 연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공무원이 있는 만큼, 일방적 통보보다는 대책을 마련하고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천홍희 기자 strong@

광주 송원초 앞 스쿨존 심야 시속 50km 가능

14일부터 20시~08시 시범 운영

14일부터 광주시 남구 송원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시간대에 따라 제한속도가 달라진다.

광주경찰청과 광주지방법원경찰은 광주시 남구 송원초 스쿨존으로 지정된 송암로 일대에서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어린이의 이동이 적은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 시간대는 시속 50km로 운영하기로 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스템은 일정 조건에서 제한속도를 변경해 단속카메라가 작동하는 것이다. 속도제한 구간 시점과 종점에 설치된 LED 속도

표지판에 단속중인 제한속도가 표시된다.

시범 구간으로 선정된 남구 송원초 앞 송암로는 송암산입단지 불류 수송 기능을 가진 남구와 서구를 연결하는 도로로 야간시간대 보행자가 많지 않아 야간에는 제한속도를 상향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돼 왔었다.

경찰은 광주·전남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 점에서 3개월 가량 시범운영을 한후 하반기에 광주 시내 7곳에 확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검토 대상지는 스쿨존임에도 불구하고 대로변에 위치해 광주에서 가장 늦게 속도제한이 낮춰진 곳으로, 광산구 3곳(송정서초교, 하남초교, 정암초교), 서구 1곳(만호초교), 남구 2곳(송원초교, 삼육유치원), 북구 1곳(교대부속초교)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황사 씻어내는 중
이들때 황사경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북구청 살수차가 13일 일곡동의 도로에 물을 뿌리며 청소를 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mjna@

5·18기념재단 '평화의 걷기' 행사

강제동원시민모임과 15일 광주시청·민주광장 등서

5·18기념재단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과 공동으로 광주시 일대에서 '기억과 연대를 위한 평화 걷기'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내 5·18민주화운동과 일제 강제동원 피해, 4·16 세월호 9주기 등을 기억하는 역사 공간을 걸으며 의미를 되새기는 걷기 행사다. 행사는 전교조 광주지부, 광주교사노조, 광주실천교사 등 광주지역 교원단체의 제안을 받아 기획됐다.

걷기 코스는 2개로 나뉜다. 오전 9시에는 광주 시청 앞 평화의 소녀상에서 출발해 양동시장으로 향하는 6km 길이 코스를, 오전 10시에는 옛 전남

도청에서 출발해 금남공원 평화의 소녀상을 지나 양동시장으로 가는 3km 길이 코스를 운영한다.

비가 올 경우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의미에서 노란 우비를 배부하고, 참가자에게 '세월호 리본'이 달린 팔찌를 배부하는 계획도 세웠다.

주최측은 행사 이후 오전 11시께 양동시장에서 모여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를 만나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일정도 검토 중이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참가 신청 및 문의는 인터넷(https://forms.gle/CoFZBgFEW2ecF6pN8)이나 전화(062-360-0542)를 통해 할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정부, 강제동원 배상금 수령 신청서 전달 시민단체 "주권 포기 행위 즉각 중단하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와 지원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제3자 변제안'을 강행하고 있어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피해자 지원단체인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13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말하는 '해법'은 피해자와 유가족의 법적 권리 실현이 아니라 권리를 짓밟는 행위이자 주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부에 배상금 지급 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가 최근 피해자 유족 2명에게 배상금 수령

신청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따른 반발이다.

시민모임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2018년 대법원에서 배상 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2명에게 최근 배상금 명목의 '판결금' 지급업무를 시작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정부가 해법으로 내 놓은 '제3자 변제' 방식을 강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에서 패소한 일본제철·미쓰비시 등 일본 전범기업들은 한국 대법원 판결을 부정

하며, 출금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일본 기업도 낮찍이 두껍지만, 일본 기업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데 피해자 정부 재단이 나서서 책임을 왜 대신 지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제3자 변제'는 채권 소멸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외교부의 발언에 대해서도 민법469조에 따라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국인 시민모임 이사장은 "오는 19일 오전 11시께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에서 배상에 찬성 의사를 비친 유족은 한 명으로, 피해자 한 명당 지급 액수는 배상금과 지연 이자를 합쳐 2억 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1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용산지점 062)526-0222~3
치평지점 062)381-8212~3
쌍촌지점 062)381-6551~2
와정지점 062)372-0421~3

유동지점 062)512-1984~5
농성지점 062)361-4472~4
동림지점 062)513-8521~3
운암지점 062)527-3295~6

유덕지점 062)373-3235~6
승문지점 062)528-2640~2
버들지점 062)381-1971~2
운전지점 062)371-2772~3

삼암백산지점 062)529-5335~6
삼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